



국제리뷰

- 제5차 한국 베트남 여성포럼
이선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여성안전과 노인빈곤 연구결과 성과의 국제적 공유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사업의 우수성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5차 한국 베트남 여성포럼

이 선 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6월 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제5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제5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경험 공유 및 확산’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하이즈영 지역의 여성 직업훈련기관 방문,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베트남여성연맹 주석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한-베 여성포럼은 한국과 베트남의 정책을 중심으로 양국이 어떻게 차별화 된 사업 운영 방법을 보이고 있는 지 확인하는 기회이자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기념세미나

2017년 6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여성연맹 대표단과 여성정책 연구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및 여성경제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국-베트남 여성 포럼’의 기념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념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은 한국과 베트남의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은 ‘성주류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선주 선임연구위원이 ‘중양부처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베트남에선 Dang Van Thanh 국회전문가가 ‘예산에 대한 성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은 ‘여성친화도시’를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1개 발표와 베트남의 2개 발표로 구성되었다. 베트남의 다낭시 여성연맹 주석 Nguyen Thi Thu Ha가 ‘여성친화 다낭시’를 주제로 발표,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에 기반한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Nguyen Thi Ngoc Bich 호치민시 여성연맹 주석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호치민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념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션 1의 첫 번째 발표 ‘중양부처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조선주, KWDI 양성평등 추진전략단장, 선임연구위원)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성평등 관련 각종 지수를 바탕으로 양국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성평등 취약부분에 대해 진단했다. 또 한국에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의 소개, 주요 성인지 정책의 성과를 제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소개 및 제도시행의 효과를 설명하고, 특히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시행의

효과를 제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예산에 대한 성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Dang Van Thanh, 국회 전문가·교수)’으로 베트남은 2013년 ‘베트남 헌법’ 제26조에 ‘남녀평등, 정부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 발전 및 성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젠더를 고려한 국가 예산수립, 국가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등 예산 수립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자원 배분, 국가 예산 모든 과정을 성평등하게 운용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션 2에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성주류화 정책’, ‘여성친화’를 주제로 총 3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다낭시(Nguyen Thi Thu Ha, 다낭시 여성위원회 부주석, 여성연맹회 주석)’를 주제로 다낭시의 대표적 여성친화정책을 조직(여성진보위원회), 시설 및 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다낭시의 경우 저소득·싱글 여성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 관리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실시중이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30%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여성친화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두 번째 발표는 ‘지역정책의 성주류화 확산 : 여성친화도시(이선민, KWDI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한국에서의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76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정,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수성여성클럽’이 협동조합을 통해 생활밀착형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는 ‘달서일자리 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파악,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 있는 사례임을 제시했다. 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여성친화 희망기업’ 선정에 대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안전’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노란 별길 사업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500보 사업’, 마지막으로 경기도 부천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엄마손 프로젝트’나 ‘마을밥상’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호치민의 선언(Nguyen Thi Ngoc Bich, 호치민시 여성연맹회 주석)’을 주제로 호치민 시에서 운영중인 여성친화 사업에 대한 소개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베트남은 ‘여성친화도시’로 규정한 도시나 지역은 없고, 한국과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성중심의 정책, 성평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현재 호치민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성주류화 정책, 혼인가정법, 양성평등법,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베트남여성연맹 조직의 구조와 활동 등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향후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개념을 만들고, 많은 지역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며, 공무원의 인식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한국과의 지속적인 성주류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류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 법과 계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확대,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사진 1] 2017년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기념세미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베트남여성 연맹 간담회

간담회는 베트남 여성연맹 주석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베트남여성연맹의 주석인 응웬 티 투 하(Nguyen Thi Thu Ha)는 2016년 4월 베트남여성연맹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베트남여성연맹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 포럼을 통해 양 기관의 대표가 처음 인사를 나눈 자리로 간담회는 베트남여성연맹 주석이 현재 연맹의 운영, 구성현황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연맹은 국회에서 예산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연맹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구이며 1명의 주석과 4명의 부주석(총 6명이나 현재 2명 공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맹의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보다 더 끈끈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베트남여성연맹은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확대, 정책개발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유사한 '종합여성연구기관'의



[사진 2] 베트남여성연맹과의 면담 및 간담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 준비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득 과정,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회, 정부 등의 지원 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특히 설립 시 국회나 정부기관의 노력, 정관, 예산 등 실질적 운영방안과 성인지 교육과 성별통계의 생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7년 연맹을 중심으로 베트남 양성평등법 제정 10년의 성과를 정리할 예정이며, 그 주제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10년 평가와 과제’로 제시될 것이며, 정리과정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평등 정책 집행 노하우를 성공 사례로 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향후 베트남여성연맹, 몰리사(MOLISA), 국회 사회문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 공유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정부의 적극적 협력-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제6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은 베트남여성연측이 한국에 방문하는 해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법적 근거 마련, 베트남 결혼이민의 여성 처우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여성안전과 노인빈곤 연구결과 성과의 국제적 공유

-2017년 AICLP와 AICSSH 참가를 중심으로-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많은 연구들이 국내의 연구들이나 실무자들 사이에만 읽혀지고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2017년 8월 두 개의 학술행사에서 본원에서 수행하였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2017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국 옥스퍼드에서 진행된 「4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w and Policy(AICLP)」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w and Policy(AICLP)는 Institute of Research, Learning and Development(FLE)에서 주관하는 국제학회이며, 연구자, 정책결정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 규율, 규칙, 정책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 연구성과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활동해 왔다. 이 학회는 인권, 환경, 노동 등 법률 제반을 비롯하여, 젠더, 노인,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공공보건,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하위주제로 포괄하기 때문에 여성안전정책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대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수탁과제로 수행되었던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의 내용의 일부로 “Poverty of the Elderly Women in South Korea: Improving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policy based on the gender perspective”를 제출하여 Oral presentation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잘 알려져있듯이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과 개인적인

연금 등이다.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각지대 규모를 남성과 여성, 성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집단과 여성집단의 18~59세 인구집단은 각각 1,656만명과 1,576만명으로 여성집단이 약 80만명 정도 작다.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남녀 각각 79.5%, 59.8%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간 격차가 19.7% 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적용대상 규모도 남녀 각각 1,287만명, 908만명으로 387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남성과 여성 간의 빈곤격차로 이어진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성노인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을 보상하고 성인지적 공적연금제도 체계를 구축하여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저소득 노인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노노케어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정보에 취약한 여성노인에게 일자리 정책을 홍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 및 보건생활에 있어서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통해 여가, 보건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노인전문상담센터를 확대해서 소외된 노인들의 돌봄을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생활지원에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여성노인의 주거개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지 현재 한국의 여성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3rd Academi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AICSSH)」에 참석하였다. 이 학회는 Institute of Research, Learning and Development(FLE)에서 주관하는 국제학회이며, 다양한 배경을 갖춘 연구자, 정책결정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동과 고용관계,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 정보과학, 종교학, 문화학, 법학, 국제관계 등 폭넓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현안을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가 참석하였는데, 특히 여성과 아동·가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슈를 하위주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안전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에 좋은 장으로 보인다. 이 학회에서는 2016년 본원의 기본과제로 수행되었던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Rebuilding Women Safety Policy by the Life-Course Approach: Gender Differences in Risk Management Capacity of the Household and Living Spaces”를 제출하여 Oral presentation 대상으로 선정되어 발표하였다.

국가적 재난사고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요구도의 발굴이 시급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다수 여성들의 주생활공간인 가정에

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역량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밝혔다. 여성안전 일반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현황과 교육경험, 안전역량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 및 경험의 변화에는 위험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 연구를 위해 실시된 <여성안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성인남녀 2,000명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2016년 7월 기준)를 기반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성, 연령을 고려하여 표집을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안전 생활습관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5개 안전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둘째로, 최근 1년 주변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와 정보를 접한 교육 종류 및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안전교육 인지 및 경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실제 안전교육 경험을 받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방식, 횟수, 시간, 실시 주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수요 및 필요성에서는 향후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 종류, 희망 교육 형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도 및 우리사회 안전 정도,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역량의 성별격차는 노년기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노년기 여성의 안전역량은 남성에 비해 전 분야에서 낮았다. 국민안전처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에 따르면 노년기는 안전 환경을 확보하는 안전교육 유지기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분석 결과, 안전 인식이나 안전 실천 정도를 통해 살펴 본 노년기의 안전역량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안전 환경이 확보될 만큼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범죄안전,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전 생애주기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노년기 여성의 안전역량은 남성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난다. 즉,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인식 확보와 실천을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안전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안전교육 경험과 안전교육 정보 접촉이 안전실천 역량수준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안전교육 관련 경험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안전교육 경험 여부가 안전실천 역량 증감에 전혀 효과를 주지 않았던 것에 반해 여성의 안전교육 경험 및 안전 정보 인지는 안전 실천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안전교육의 실질적 교육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강하게 작동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학회 참가 결과 한국에서의 여성정책 연구에 대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국가에서 온 연구자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인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반면 영국이나 선진국의 참가자들은 동일한 고령화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는지, 유교적인 전통에 기반한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성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국내에서의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해외학자와 경험하고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질문을 받는 것은 연구

자로서 좋은 자극을 받는 경험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서 발표자로 선정되는데는 학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2-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혹시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이 기간을 감안해서 참가신청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사업의 우수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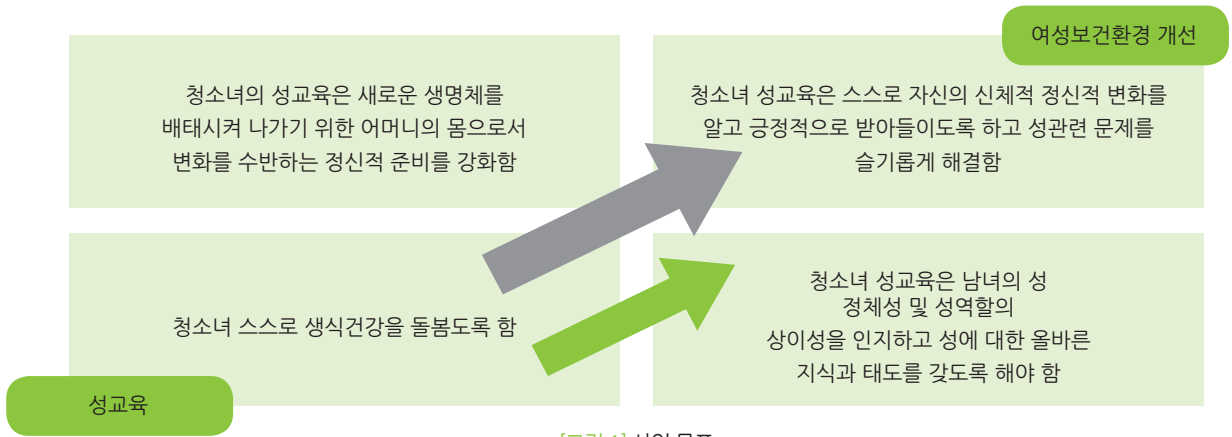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2차 사업(Preventing Teenage Pregnancy and Improv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for Young Women in the Dominican)은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위탁사업 수행 파트너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선정한 계기로 시작된 사업이며 2015년에 종료된 사업이다. 무려 7년이 걸린 이 사업은 현재 도미니카 지역 ODA 사업 중 우수성을 인정받아 동 사업 관련 후속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주요 성과로 2011년 3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성년 임신방지 국가계획이 만들어져 실시되어졌다. 13-19세 미성년의 임신 지수를 현재의 22.1%에서 2016년 18%로 줄이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고,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사회학적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 임신부의 산후 의료적 지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 탈피해 근본적 청소년 임신 원인에 대한 보건사회학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교육 및 임신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시기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생식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성교로 인한 질환(성병, HIV/AIDS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사업이었다(그림 1, 참조).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남학생 보다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여학생들을 고려하고 있어 여성보건환경 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 여성의 임신은 (1) 학교 교육 중단으로 인한 교육 기회 상실과 (2) 출산으로 인한 발육 저하 및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3) 여성의 구직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나아가서는 (4)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사업이었다. 여성보건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미성년 임신 방지 관련 2차 사업은 성인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성부가 주도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국내 및 타 선진국의 원조 기관이 수행한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동 사업평가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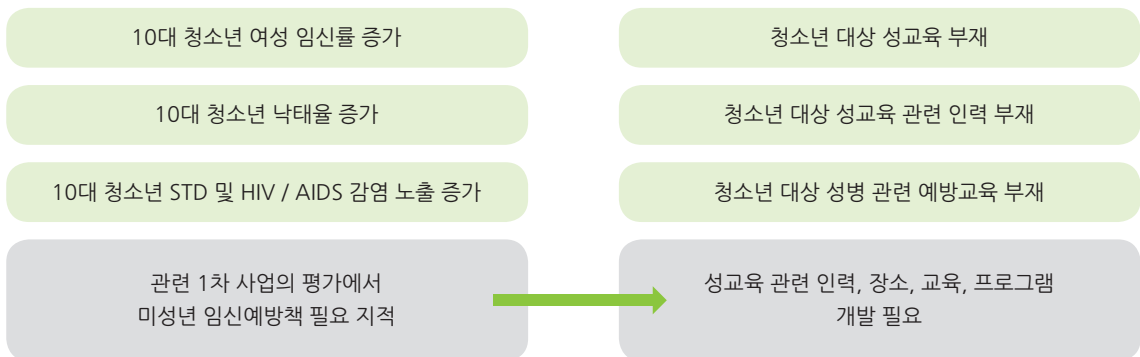
1) 김영혜 외(2015).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2차 사업, 종료평가결과 보고에서 인용되었음



[그림 1] 사업 목표

우리 정부는 2006-2007년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를 통해 1차 사업으로 40만 불을 지원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6개 지역의 병원 기자재 공급 및 수원국 자체 운영으로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1차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는 2007년 12월 실시되었다. 평가단은 사업대상지 6개소를 방문하여 기자재 활용실태와 청소년 임신예방 처치 및 조기진단 역량의 향상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지원 기자재는 적절히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 기자재가 주로 산전 후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임신예방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기자재 지원이나 활동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성 교육 관련 인력, 장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후속사업을 추진하였다(그림 2, 참조).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벤치마케팅 하여 도미니카 지역 문화에 맞는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성 교육을 실시하고 성 교육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었다. 또한 도미니카 타 지역의 학생들 대상 초청 교육 및 성 교육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성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유발하는 전략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 개선 사업의 주요 전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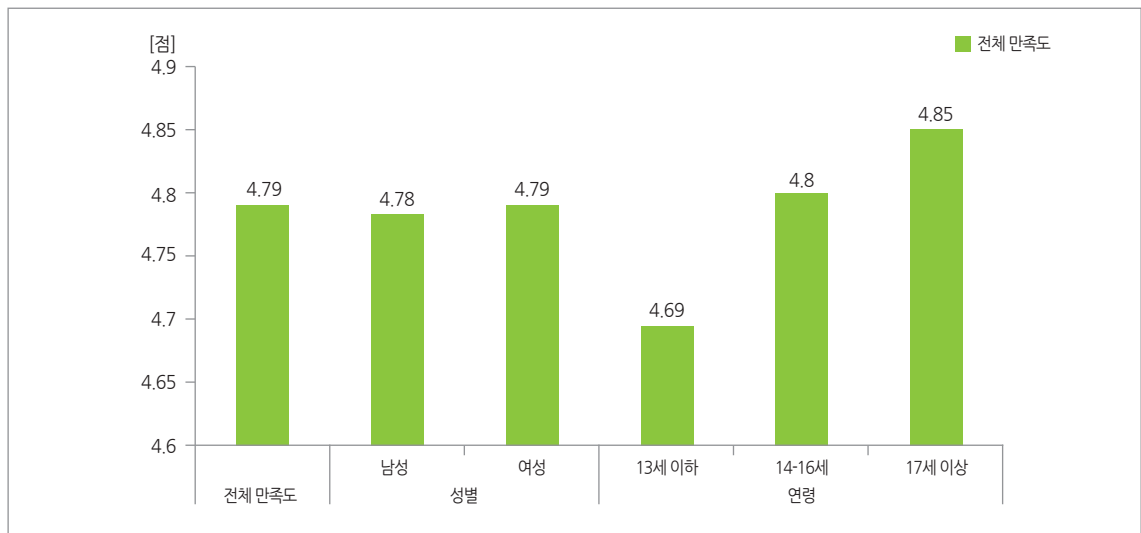


[그림 2] 사업 전략

사업의 종료시점인 2015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청소년 성교육센터가 건립이 완료되었다. 완료된 후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방문한 청소년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는 남학생은 13명, 여학생은 36명으로 총 49명이었다. 청소년 성교육센터 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크게끔 코딩하였다. 5점 만점에 평균 4.79로 나타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를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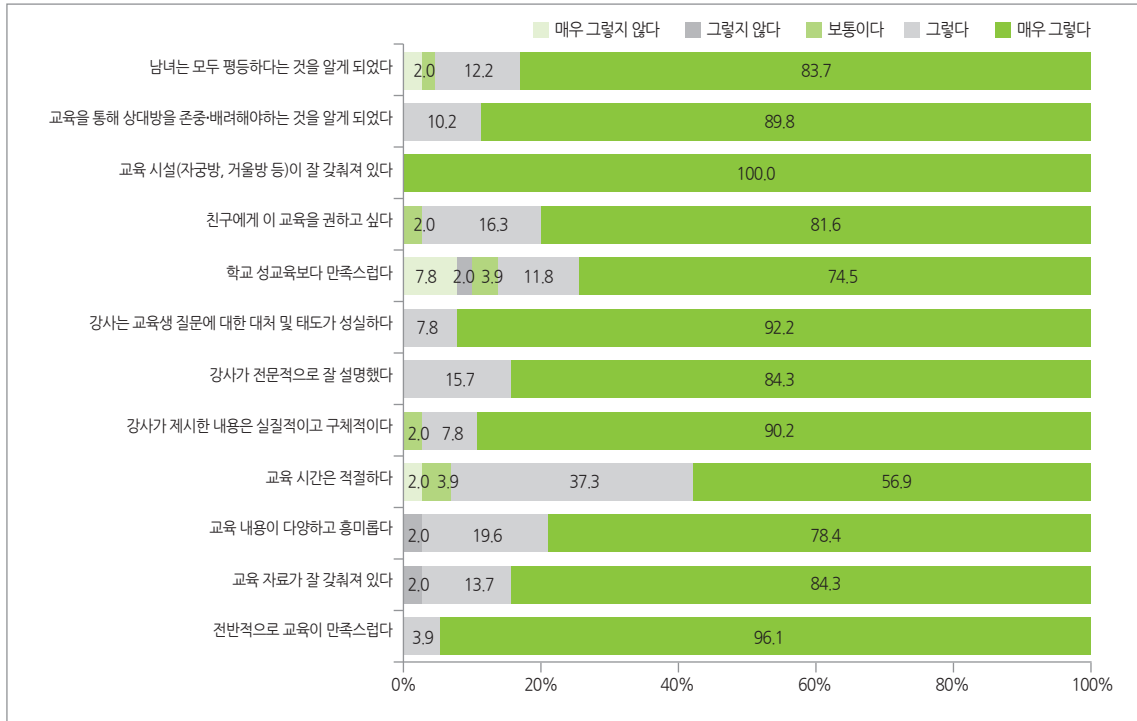
〈표 1〉 청소년성교육센터 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만족도		49	4.79	0.265	3.83	5.00
성별	남성	13	4.78	0.347	3.83	5.00
	여성	36	4.79	0.234	4.17	5.00
연령	13세 이하	13	4.69	0.308	4.17	5.00
	14-16세	21	4.80	0.277	3.83	5.00
	17세 이상	13	4.85	0.187	4.42	5.00



[그림 3] 청소년성교육센터 만족도

아래의 〈그림 4〉에서 청소년 성교육센터 교육 관련 각 의견 대부분의 문항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성교육 관련 의견 조사

청소년 성교육센터의 긍정적인 효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48명중 97.91%(47명)가 청소년 성 교육센터 방문 후 성 관련 지식이 증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교육 지식이 미성년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 변화로 연계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75%로 나타났다. 향후 객관적인 지표로 동 사업을 엄격히 평가함이 필요하고 성별 통계를 근거로 청소년 성 교육센터 교육 내용을 성별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만족도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도미니카의 청소년 성교육센터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청소년 성교육 센터 건립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중남미 보건부장관 자문위원회 회의 마지막 의결에서 7개국 중남미 보건부 장관들은 도미니카 정부가 발표한 성보건 및 재생산 개발에 필요한 공공 정책 중 “중남미 미성년 임신방지를 위한 지역 계획”을 채택하고 검토 후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해 동의했다. 미성년 임신방지계획의 내용은 성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할 법적 토대 마련, 성보건 서비스 제공 및 적절한 방지, 성보건 및 재생산에 대한 정보 시스템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